

## 농업동향

### 정부, 쌀 관세율 513%로 결정

- 농가 소득안정 및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도 마련 -

- (WTO 통보) 쌀 관세율을 WTO협정에 근거하여 513%로 결정하고, 수입물량 급증시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긴급관세(SSG) 부과 근거를 명시
  - \* 기존 의무수입물량 409천톤은 관세화 이후에도 5% 관세율로 수입 허용
  - 관세율은 WTO 회원국들에 의한 검증절차를 거쳐 확정
  - 그동안 체결한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참여 결정시 TPP 포함)에서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방침
- (부정유통·편법수입 방지) 수입쌀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통관단계의 저가 신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
  - '15년부터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유통 금지 추진
  - 저가신고를 통한 쌀 편법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시장 교란을 예방하기 위해 쌀을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
  - \* 사전세액심사 : 농수산물과 같이 가격변동이 크거나 저가신고 가능성이 높은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전에 관세액을 심사하는 제도
- (쌀 산업 발전대책 수립) 지난 20년간 쌀 산업에 대한 투자 성과를 토대로 관세화 이후 농가 소득안정 장치를 강화하고 쌀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중점
  - (소득안정 강화) 고정직불금 단가를 '15년 100만원으로 조기 인상, 동계논 이모작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쌀값 하락시 지급하는 변동직불금 제도 유지·보완,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및 농지연금 등 영세·고령농 안전망 확대
  - (규모화·조직화 등 경쟁력 제고) 대농·소농간 공동경영을 하는 들녘경영체를 쌀 산업 주요 주체로 육성하고 RPC와 연계하여 생산·유통 효율화, 쌀 전업농 규모화 지속 추진,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RPC 통합
  - (소비·수출 촉진) 벼 재배면적과 쌀 소비가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쌀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소비 촉진·가공산업 육성, 수출 확대 등 수요기반 확충, 쌀 생산자단체 주도의 산업발전 도모를 위해 쌀 자조금 도입여건 조성
  - ('15년 예산) 농가소득 향상 및 쌀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주요 과제 추진을 위해 '15년 예산안을 '14년 대비 1,568억원 증액
    - 생산기반 확충(519억원 증)과 신소재·신기술 개발 등 R&D (41억원 증)에 대한 투자 확대 포함시 총 2,128억원 증액
- (향후 일정) 관세율 등은 9월말까지 WTO에 통보 후 10월부터 WTO 검증절차에 대응할 계획이고, 국내 법령 개정 등을 거쳐 '15년부터 관세화 시행
  - 쌀 산업 대책은 쌀 산업발전협의회와 국회 논의를 고려하여 보완

## ● 농식품부 '15년 예산 및 기금안 14조 940억원 편성

- 농업체질강화(29,618억원), 농가소득·경영안정(26,546억원), 식품업(8,369억원), 농촌복지(4,560억원) 등 농식품분야 투자 -

### 1 '15년 예산 및 기금안 총괄

- 농림축산식품부의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금년대비 4,569억원 증액된 14조 940억원으로 편성
- '15년 정부 전체 총지출 규모는 확장적 재정편성으로 금년대비 20.2조원 증액된 376.0조원으로 편성

### 2 편성방향 및 주요 특징

#### ❖❖ 편성방향

- “농산물 시장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농업의 미래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 투자 확대
  - 창조농업 육성을 통한 농업분야의 미래성장산업화에 집중
    - 농촌의 부존자원과 2·3차 산업을 연계한 6차산업화, ICT융복합·R&D·중자산업 등 농식품분야 新성장동력 확충 등
  - 쌀관세화, 영연방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농식품 경쟁력 강화 및 체질개선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되,
    - 영세·고령농을 위해 작지만 체감도 높은 복지지원을 통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개발 확대에도 재정투자를 강화
  - 또한, 가축질병, 재해대비 등 안전분야의 예산지원 강화

#### ❖❖ '15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

- ① 농식품 미래성장산업화 기반구축(7,240억원→7,696, 증 6.3%)
- ② 쌀관세화,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식품 경쟁력 강화(3조 4,631억원→3조 5,649, 증 2.9%)
- ③ 재해방지 등 농식품분야 안전·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2조 1,406억원→2조 3,901, 증11.7%)
- ④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 확대(3조 7,785억원→3조 9,406, 증4.3%)
- ⑤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지원 확대 (4,277억원→4,560, 증 6.6%)
- ⑥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예산 확대(7,723억원→8,369, 증 8.4%)
- ⑦ 농산물의 유통 및 수급·물가안정분야 지원 내실화 (1조 5,840억원→1조 6,197, 증 2.6%)
- ⑧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지원 강화(1조 5,325억원→1조 5,042, △1.8%)
- ⑨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신규사업 적극 발굴·반영 (9개 사업 - 458억원, 내역사업 - 602억원)

### 3 재정사업 내실화 및 향후 계획

- 농식품부의 '15년 예산 및 기금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 아울러, 재정사업의 평가와 점검을 강화하고, 집행과정도 꼼꼼히 챙겨나감으로써 당초 의도한 정책성과를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할 계획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 요약〉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수산물 수출 확대방안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8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농수산물 수출 추진현황 및 확대방안'을 보고하였다. 이번 대책은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2013년 9월)에서 보고한 '농수산물 수출 확대방안'의 후속보완조치로서, 41가지 세부 추진과제를, 6가지 추진전략(①가공식품의 수출 첨병화, ②신선 농산물의 수출확대 방안, ③수산물 수출확대 방안, ④수출업체 맞춤형 정보시장개척 지원, ⑤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新마케팅 추진, ⑥수출 추진체계 강화)으로 구분·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검역문제에서 다소 자유로운 가공식품을 수출 첨병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다만, 가공식품 수출이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연결될 수 있도록 원료로 국산 농수산물의 사용을 확대해 나가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선 농수산물은 농수협을 중심으로 수출물량을 규모화·계열화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국가별·품목별로 해결되지 못한 검역문제는 범부처 대응을 통해 조기 해소하기로 했다.

그리고 최근 중국동남아에서 거세게 불고 있는 한류 붐을 농수산물 수출확대에 활용하기 위해 음식관광과 연계한 마케팅 전략과 글로벌 온라인 마켓을 활용한 농수산물 수출확대 전략 등 기존에 없던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었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부,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 본격 착수

정부는 8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15~'19) 기본계획」(이하, 제3차 삶의 질 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하고 계획(안)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도농간 격차 완화 및 '누구나 살고 싶은 농어촌'을 구현하기 위해 특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농어촌 가구의 소득 증대와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일자리 분야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안전 분야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자연재해, 범죄·사고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각 분야별 주요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국민연금, 농지연금 등 노후소득안전망을 보강하고 거점의료기관 육성, 방문건강관리 확산으로 의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학생통학, 1㎡ 1개 초교유지 등 농어촌 특화 지원을 강화, 다문화 예비학교·교육복지 지원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생활권 기반) 공동체 주도의 농촌마을 리모델링, 공동생활홈 조성,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등 체감형사업 확대, △(문화·여가) 마을공동·유휴시설을 활용한 지역밀착 생활문화센터와 작은영화관·작은도서관 등 농어촌형 문화공간을 조성, 향토문화복원·재창조, △(일자리)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 일자리·부가가치 확대, △(안전) 자연재해와 범죄·안전사고에 안심할 수 있는 농어촌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농가 백신 미접종 시 불이익 조치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조치를 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경북 2건(의성·고령), 경남 1건(합천) 총 3건의 구제역이 발생하였으며, 발생 원인이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미흡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살처분 시 살처분 보상금을 20% 추가 감액하기로 하였으며, 원칙적으로 축산정책자금 지원 대상 및 일정기간 동물용 의약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이번 구제역 발생의 책임 소재의 경중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 정부는 우리나라 주변국의 지속적인 구제역 발생과 백신 미접종 농가 등을 고려할 때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소, 돼지 등 축산농가는 백신 접종 및 소독 등을 철저히 하고, 축사별로 한 마리도 빠짐없이 올바른 방법에 따라 백신접종을 실시하여 줄 것을 축산농가에 당부하였다.